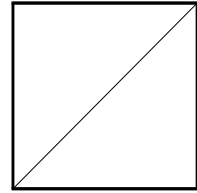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6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 (제 4 차)

의  
결  
사  
항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3. 2.

## 1. 의결주문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신용협동조합법」상 위반사항인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과 관련하여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前 이사장 ○○○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개선 상당)으로 통보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2023.1.19.) 심의필
- 제4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2.23.) 심의필

<별지>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前 이사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임원에 대한 조치

- 前 이사장 ○○○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개선 상당)으로 통보

#### 조치 대상자 명세

직 위	성 명	귀 책사항
前 이사장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른 손실 초래

- 법적 근거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2조, 제84조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6조, 제52조

## 2. 조치사유(지적사항)

### 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른 손실 초래

-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고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① 2xxx.xx.xx.~2xxx.xx.x. 기간 중 실차주 (주)□□□□□□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등 ◇◇억 ◇◇백만원(△△건)을 취급함으로써, 2xxx.xx.x.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억 ◆◆백만원)를 최고 ●●억 ●백만원 초과(2xxx년말 자기자본의 ▲▲▲.▲%)하였음

② 또한, 상기 대출(■●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주)○○○○○ 등 명의차주는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차주 (주)□□□□□□도 부실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누락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함에 따라 ◆◆억 ◆◆백만원의 손실(2xxx.x.xx. 상각)이 발생하고, ▽▽억 ▽▽백만원의 대출이 고정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2조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4. 舊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개정 前) 제6조
5.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 관계 법규

###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정관·규정이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2016.10.24. 개정 이전>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⑥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산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한다.

⑦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인 조합 : 30억원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조합 : 50억원

### <2016.10.24. 개정 이후>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⑥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산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

⑦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이 법인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

## □ 「금융기관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 3. 문책경고
  -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바. 금감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의적 경고
    -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3. 감봉
  -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변상 여부

5.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별표 2>

제재양정기준

유 형 \ 위법 · 부당의 정도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 ~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등 범죄행위	"	해임권고(면직) ~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 주의적경고(견책)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해임권고(면직) ~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	"	"
직무태만	"	직무정지(정직) ~ 문책경고(감봉)	"
기타 위법	"	"	"

<별표 3>

V-2. 신용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동일인대출한도초과 대출취급 등

1. 제재대상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2. 제재기준

제재의 종류	자기자본대비 기준		총자산대비 기준	
	차주별 한도초과 취급액비율	한도초과취급 합계액비율	차주별 한도초과 취급액비율	한도초과취급 합계액비율
개선(改選)/면직	50% 초과	100% 초과	25%초과 또는 7억원초과	5%초과 또는 21억원 초과
직무정지/정직	30%~50%	50%~100%	1.5%~2.5% 또는 5억원~7억원	2.5%~5% 또는 11억원~21억원
문책경고/감봉	20%~30%	30%~50%	1%~1.5% 또는 3억원~5억원	1.5%~2.5% 또는 9억원~11억원
주의적경고/견책	10%~20%	20%~30%	0.5%~1% 또는 1억원~3억원	1%~1.5% 또는 3억원~9억원

- 주 1) 동일인대출한도가 자기자본기준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자기자본대비 초과비율로, 총 자산기준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총자산대비 초과비율(금액)로 양정
-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
- 3) 각 정해진 범위는 ‘초과’부터 ‘까지’임.
- 4) 총자산대비 기준으로 양정시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제재종류가 총자산비율대비기준과 금액대비기준에 따라 서로 다를 경우 더 무거운 제재로 함.
- 5) 대출한도 초과취급 규모가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주의 등 조치

3. 가중 및 감경

취급 당시의 동기나 상황 및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재양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3억원 이상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양정보다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일반지적사항 포함)되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다. <삭제 '10.8.31'>
- 라.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 I 편 제3장 제1절 제9조(채무상환능력 확인) ② 담보대출을 심사·승인할 때에도 채무자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과 신용도, 보증력과 담보를 비롯한 2차 상환재원 등 제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상호금융국
연 락 처	02-2100-2994	02-3145-8079